

POLITICS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새 정부 첫 내각 ‘위기 극복·고강도 개혁’ 방점

강덕원, 시선관위 사무처장 취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일자 신임 사무처장에 강덕원 부이사관 (3급·사진) 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덕원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 인사과장, 광주선관위 총무과장, 전남선관위 선거과장 등 다양한 직제에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았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선거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선관위 상임위원에 위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위한 관리관 (1급·사진) 이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위한 신임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대전시·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선거전문가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마늘 산업 활성화 모색

소득안정·유통구조 개선 등

전남도는 30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 주산지 시군과 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마늘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남은 마늘 대표 주산지로, 2025년 2894ha에서 재배,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마늘 생산자단체는 지난 12일 전남 마늘 산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전남도와 농협전남본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남산 남도마늘의 소득안정과 마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지 공판장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전남도와 주산지 시군, 농협 등이 소득안정 방안과 수매 시 마늘 규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 산지 공판장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K-제품, 유럽시장 공략

파리서 487만달러 수출상당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중앙생일자리재단은 지역기업 6개사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 (Korea Expo in Paris 2025)’에 참가, 광주 공동관을 운영하며 총 48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당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제로젤(공기청정기 등 에어가전), 센소리(공기순환기), 유니컴퍼니(열화상 카메라), 티아이파인터내셔널(두파케어기), 스위치온(조명기구), 2월의산(나전칠기 자개보석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들이 참가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광주 K-제품의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선보였다.

행사 기간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참가기업들은 향후 정식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중량급 여당 의원·전문가 폭 넓게 인선

실용·안정 집중…‘문제 해결’ 속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까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윤곽을 드러낸 1기 내각은 대내외 위기 극복과 강도 높은 개혁 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이날 6명을 추가로 지명함에 따라, 19곳 장관급 인선 자리 중 17곳을 채웠다.

취임한 지 27일째인 30일 현재 내각 후보자 가운데 빈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이런 인선 속도는 역대 정부들과 비해 빠른 편이다.

이재명 정부와 똑같이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하기까지 54일이 소요됐다. 인수위를 거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일부터 내각 지명 완료까지 36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걸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경제·안보 상황도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내각에는 친명(친이재명) 계열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역 의원 8명을 지명했고 기업·관가·학계 등 가지 않고 전문가를 발탁했다.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중량급 정치인을, 미래를 위한 대응과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를 중용해 개혁이든 민생안정이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지명된 현역 의원은 김 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안규백 국방·김성환 환경·강선우 여가·전재수 해수·정성호 법무·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으로 최근 정권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임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내각에 입성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현역 의원이 3명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1기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다 당정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쌓아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산적인 개혁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역대 정권보다 의원 자출에 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답이 달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역 의원들이 지명된 부처는 대부분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부처들이다.

법무부, 행안부, 국방부 세 부처가 대표적이다.

정성호 후보자가 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법부 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호중 후보자가 맡은 행안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경찰국 등을 개혁해야 한다.

안규백 후보자가 민간 출신 가운데 최초로 맡은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3 계엄으

로 폐해가 드러난 군 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 5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통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에게 개혁의 열쇠를 맡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사회 부처 인선에서는 기업이든 관가이든, 학계든 가리지 않고 전문가를 이 중용된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대내외적 위기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를 서둘러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임무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LG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지 테리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산업 현장의 전문가를 등용한 것은 실용주의적 발상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쳐 정책통로로 역량을 쌓은 관료 출신이다. 대학 총장까지 지낸 교육자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를 발탁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정위, 지방 돌며 정책 제안·민원 접수

강원·충청·경상·호남권 순회…현장 소통 화~목 운영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4일까지 강원·충청·경상·호남권을 방문해 정책 제안·민원을 접수한다.

국정기획위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두의광장은 이재명 정부들어 출범한 국민 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이다.

국정위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불·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

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소통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권역별로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정위는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문 조사관들이 나서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관계부처 등과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국정위는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문옥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

박 위원장 건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채택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사진)이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됐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박 위원장이 상정한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박문옥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제4·3이 국가 차원의 역사적 책임을 명화히 했듯, 5·18도 특별법 제정,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제는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이슈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상징”이라



며 “헌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17개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적 합의 형성과 정치권의 결단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2025년 실시된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18을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8월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되며, 채택 이후 국회와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 청년정책 빛났다…정부 평가 3년연속 ‘우수’

국무조정실 추진실적 평가…청년 삶의 질 향상 인정
AI사관학교 사례…일일경험드림·청년일자리 제공 호평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50점), 청년 삶·환경 반영(30점), 청년참여·주도성(10점), 청년정책 홍보(10점)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각 시·도에서 제출한 일지리와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7대 분야별 대표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광주시는 대표과제로 일자리 ‘광주 청년 일일경험 드림 플러스’, 주거 ‘광주형 청년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교육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금융 ‘청년 드림은행’, 복지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 문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GCC사관학교)’, 참여·권리 ‘광주청년위원회 운영’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과 취·창업률 제고에 기여한 ‘일일경험드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 ‘인공지능사관학교’, 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GCC사관학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에 앞장선 ‘청년드림은행’,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한 ‘청년위원회’ 운영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10개월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기

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평가단은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00여 명에게 인건비 및 직무경험을 제공한 ‘일일경험드림’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들이 2년간 1000만원을 모아 지역에 안착하도록 돕는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에서 청년정책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답자 475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된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I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민 10만3000명 에너지 절감 실천

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포인트제’ 14억 지급

광주시는 지난 한 해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관련기사 15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거나 차량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선택할 수 있고, 자

동자 분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세대 중 56%에 달하는 37만여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해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세대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세대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만3000여명에게 인센티브 14억 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시민의 참여로 총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연중 광주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는 지금,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감 실천에 동참해 환경 보호와 인센티브 혜택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